

운전기사가 매번 휘발유 몇 리터씩 빼돌리면: 사소한 일일까, 횡령죄일까?

항소심 판결 제278/2025/HS-PT호

근거: 2025. 9. 10.자 판결 제278/2025/HS-PT호 · 2015년 형법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교훈

사건을 4개의 숫자로

매번 몇 리터씩, 합계 4억 4천만 동과 13명 유죄

3-4리터

매번 가로첸 연료, 수만 동
상당

15만 동

1인당 월 최대 50만 동, 현
금으로 분배

4억 4,155만

13명이 약 10년간 가로첸
총액(동)

2-3년

항소심이 항소인 11명에게
선고한 실형, 집행유예 없
음

범행자는 타이응우옌 소재 100% 한국계 회사의 운전기사 12명과 회사 외부 주유소 직원 1명입니다. 전원이 “재산 횡령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2025. 9. 10.자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 판결 제278/2025/HS-PT호 (사건 내용; 주문)

사건 경위

운전기사 12명, 주유소 직원 1명, 약 10년간의 연료 “빼돌리기”

G사(100% 한국계, 전자부품 제조)는 승용차 8대를 운영하며 운전기사 1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기사의 요청에 따라 연료를 지급했고, 정량 기준도 차량 고정 배정도 없었습니다.

1단계(2014–2020): 주행거리 조작

기사 K는 주행거리계를 부풀리는 “우회” 장치를 다는 법을 익혀 다른 기사들에게 알려 따라 하게 했습니다.
고정 노선 4개의 보고 거리가 실제보다 약 16–27km 많았고, 남은 연료는 빼내어 길가에서 팔았습니다.

2단계(2021–2023): 허위 기재

총무 직원은 주유 때 자주 자리에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주유소 직원 H7과 짜고 **회사 장부에 리터 수를 허위로 더 기재했습니다**.
회사는 평소처럼 월말에 결제했고, H7은 이 연료를 되팔아 리터당 3,000동을 챙겼습니다.

2024년 1월 초: 회사 점검 후 기사들은 허위 기재를 멈추고 장치를 떼어내 거리를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근거: 판결 제278/2025/HS-PT호, 사건 내용 부분

재판 결과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그러나 집행유예는 없음

피고인	1심(20/2025/HS-ST)	항소심(278/2025/HS-PT)
S3(전력 불량)	징역 42개월	징역 36개월
T4, V1, L4, L, S	징역 36개월	징역 30개월
V, D, H1, T8, H7(주유소 직원)	징역 30개월	징역 24개월

피고인 K(주도자, 주범)와 H8은 항소하지 않아 이 두 사람에 대한 1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의견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단계에서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1심 형량 유지.

항소법원 결정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각자 징역 6개월 감형, 집행유예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근거: 판결 제278/2025/HS-PT호, 판단 [3], [4] 및 주문 제1, 2항

분석 1

민간기업 운전기사도 횡령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횡령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비국유 기업까지 확대하고 “직무를 가진 사람”을 매우 넓게 정의합니다:

비국유 기업

“비국유 기업·단체에서 직무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횡령한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형법 제353조 제6항)

“직무를 가진 사람”에는 계약직도 포함

임명, 선출, 계약 또는 기타 형태로,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임무를 부여받아 그 수행 시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
(형법 제352조 제2항)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용

기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행, 연료 수령 및 차량 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이용하여** 회사가 지급한 연료, 즉 자신이 관리 책임을 지는 재산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2015년 형법 제352조 제2항, 제353조 제6항(통합문서 135/VBHN-VPQH); 판결 제278/2025/HS-PT호, 판단 [2]

분석 2

주유소 직원은 회사 소속이 아닌데 왜 횡령으로 처벌?

공범이기 때문

공범이란 **2인 이상이 고의로 함께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공범에는 조직자, 실행자, 교사자 및 **방조자**가 있으며, 방조자는 범행에 정신적·물질적 조건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형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용

2021년부터 기사들은 **H7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 직원 H7이 리터 수를 부풀려 회사의 결제 대금을 가로채도록 도운 것입니다.

H7은 3,600만 동을 챙겼고 같은 “재산 횡령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목할 점: H7은 G사 근로자가 아니지만 기사들과 같은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을 판단했습니다. H7, H1, T8, D는 후반 단계에서 가담하여 **역할이 가벼워** 가장 낮은 형(24개월)을 받았습니다.

근거: 2015년 형법 제17조, 제58조; 판결 제278/2025/HS-PT호, 판단 [2], [4]

분석 3

1인당 2천~3천 8백만 동인데 왜 7~15년 구간?

구간 1: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200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 상당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

(형법 제353조 제1항)

기사 각자가 챙긴 몫(2,050만~3,885만 동)만 보면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구간 2: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 상당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

(형법 제353조 제2항 d호)

법원은 **피고인 13명이 가로챈 총액을 4억 4,155만 동**으로 인정하고 전원을 이 구간으로 처벌했습니다.

실제 형량이 24~36개월에 그친 이유는?

피고인들은 **자발적 피해 회복, 성실한 진술, 뉘우침**(형법 제51조 제1항 b, s호)과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 기타 사정(제51조 제2항)이 있었습니다.

제51조 제1항의 감경 사유가 2개 이상이므로 법원은 **구간 하한보다 낮게** 인접한 더 가벼운 구간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제1항): 24~36개월은 구간 1에 속합니다.

근거: 2015년 형법 제51조, 제54조, 제353조; 판결 제278/2025/HS-PT호, 판단 [2], [4]

분석 4

전액 변제, 피해자 선처 요청에도 왜 실형?

법은 허용하지만 의무는 아님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인적 사항과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실형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5조 제1항)

항소한 피고인 11명 모두 징역 36개월 이하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은 전액 회복, 피해자의 선처 요청, 어려운 처지를 인정하여 **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교화와 일반 예방을 위해 **피고인들을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훈: 피해 회복은 감형에 도움이 될 뿐, 집행유예를 얻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실형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의 엄정함을 위해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근거: 2015년 형법 제65조 제1항; 판결 제278/2025/HS-PT호, 판단 [4]

위반이 약 10년간 이어지게 한 4가지 관리 허점

1. 연료 정량 기준 없음

회사는 실제 소모량과 기사 요청에 따라 연료 지급을 승인했고 소모 정량 기준이 없었습니다.

2. 실제 확인 없음

회사는 차량별 실제 연료 사용량을 기준과 대조해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3. 차량 고정 배정 없음

차량을 기사 한 명에게 고정 배정하지 않아 개인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4. 감독 공백

주유 시 총무 직원이 감독하도록 절차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주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리상의 결과: 감정으로는 점검 시점의 연료 소모량만 측정할 수 있었고, 차량별 약 10년 평균 소모량은 **확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가로챈 금액은 주로 진술에 근거하며 최소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판결 제278/2025/HS-PT호, 사건 내용 및 2024. 4. 26.자 감정 결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다음 “G사”가 되지 않을까?

정량 기준과 대조

차량별 연료 소모 정량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리터 수를 운행일지 및 고정 노선의 실제 거리와 주기적으로 대조하십시오.

차량 배정과 책임 계약

기사마다 차량을 고정 배정하십시오. 정량을 초과해 소모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또는 책임계약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노동법 제129조 제2항).

결제 단계 통제

한 단계만으로 리터 수를 확인하지 말고, 공급업체 서류를 수령인과 관리부서 서명이 있는 주유전표와 대조하십시오.

규정과 징계

직장 내 절도·횡령은 해고 사유입니다(노동법 제125조 제1항).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알리십시오.

근거: 2019년 노동법 제125조 제1항, 제129조 제2항(통합문서 18/VBHN-VPQH)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휘발유 몇 리터”가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으면 책임이 따름

계약으로 일하며 일정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민간기업에서도 형법 제352조 제2항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 쌓여 거액이 됨

매번 3-4리터였지만 여러 해, 여러 사람이 쌓이면서 총액 4억 4,155만 동이 되어 전원이 7-15년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다들 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음

기사 12명과 외부 방조자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나중에 가담해 적게 챙긴 사람도 같은 죄로 처벌됩니다.

결과는 징역에 그치지 않음

횡령자는 1~5년간 직위 취임이 금지되고 6천만~2억 동 of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형법 제353조 제5항),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노동법 제125조 제1항).

본 자료는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년 형법 제352조 제2항, 제353조; 2019년 노동법 제125조 제1항; 판결 제278/2025/HS-PT호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팀이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락하시면 심층적인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
형사/범죄

상시 법률 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찌민시 쑤언호아 동 하이바쯔م 거리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자문을 받으세요.